

경제적 국익론의 허구성 2004 출처 국민행동

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

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

2003. 10 초안

2004. 5. 일부 보완

- 주장 : 이라크에 추가파병함으로써 전후 복구사업 참여 및 석유자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,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 등으로 외국인 투자 이탈 가능성이 부각될 우려

반론1. 베트남전쟁 때와 달리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 낭망

-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브라운 각서를 통해 베트남 건설사업 참여, 군 현대화 장비 지급, 참전 한국군의 일체의 경비 지원 등 실익을 확보했으나, 이번엔 참전비용 일체를 자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
- 이라크 전쟁 초기부터 미국과 함께 싸워 온 영국도 전후 복구사업을 확보하지 못해 영국 내에서 반발
 - 이라크 현지사업자들 대신 Haliburton과 Bechtel 등 공화당과 관계가 깊은 미국 회사들이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을 독식함으로써 이라크의 실업 해결과 경제 재건이 지연될 우려 제기
 - 이라크 병력주둔 및 경제재건 비용이 예산을 훨씬 초과하여 미국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. 미국이 전후 복구사업의 상당부분을 외국회사에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곤란
- 현대건설 등 이라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도 이라크의 대외 채무 3,500억 달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라크의 장래를 위해 경감하자는 식으로 미국이 제안할 가능성 농후
- 산유국은 어차피 석유를 수출하여 재원을 조달하므로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해야 자

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

- 오히려 미국이 이슬람을 탄압하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인상을 줄 경우 석유파동 가능성 상승 (1973년 석유파동 참조)
- 최근 시베리아 안가르스크-나훗카 원유 파이프라인 사업이 가시화되는 등 원유 도입선을 다각화할 여지 충분

반론: 파병거부 시에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예상처럼 크지 않을 것

- 안보, 외교, 경제분야에서의 미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투병 파병 여부와 별로 상관없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
- 부시 재선을 위해 이미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이와 연동하여 원화가 움직이는 등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은 전투병 파병 여부와 별 상관없이 진행
 - 비전투병 파병 이후에도 하이닉스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으며, 통상문제는 결국 WTO 분쟁해결 틀 안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
- 미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의 불안요인으로 주한미군 철수, 한·미 동맹관계의 제조정 등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가능성은 심각하지 않음
 - 주한미군과 관련하여서는 후방 재배치가 대세이며, 감축한다고 해도 동북아 지역 관리 차원에서 지상군 1개 여단과 공군기지는 잔류할 가능성
 - 전투병 파병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국가리스크가 급증하고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는 것은 아니며, 대외신인도는 주로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의해 결정
 - 미 의회 의원 일부가 한·미 상호방위조약 파기 등을 위협할 수 있으나,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반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한·미 동맹을 파기할 가능성은 희박
- 파병반대국에 대해 미국이 엄청난 보복을 했다는 증거 부족
 - UN 안보리 거부권 행사를 위협한 프랑스와는 관계가 악화되었으나,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 독일·러시아에 대해 미국은 최근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 중
 - 대미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보복 제한

반론3: 파병 거부 시에 미국이 대북 강경자세를 취해 한반도의 안보불안과 이에 따른 경제불안이 초래된다는 우려도 잘못된 것

- 한국의 이라크 비전투병 파병 후에도 강경파는 대북 제재를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대화는 하되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했고, 오히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어 신보수주의자가 궁지에 몰리자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강화
- 2003년 7월 이후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자 Colin Powell 미 국무장관과 Richard Armitage 부장관 등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강화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주의자의 반격으로 인해 제1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은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했고, 북한과 중국이 미국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
-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전황의 악화로 입지가 약화된 신보수주의자를 오히려 도와주는 셈이 되며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
 - 전투병 파병과 북핵 문제 연계는 국내여론 무마용일 가능성
- 명분 없는 전쟁 참여는 오히려 우리의 국제적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

반론4: 미국의 압력도 고려해야 하지만, 이라크 추가 파병 강행 시 국내외의 정치적 압력과 갈등도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

-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 실패에 이은 팔루자 학살, 고문 학대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고, 스페인 등 파병국들 철군 또는 철군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.
- 특히 철군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내세워 파병을 결정하였으나 이라크 상황악화로 인해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파병추진 정치세력들이 총선 등을 통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임.
- 무엇보다도 파병으로 의도했던 미국에 대한 동맹관계가 파병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임
- 특히 전투 사상자 발생시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에 대한 국민정서도 동반하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